



도민 과의 아름다운 동행
충청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2021. 12.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목 차

I. 연구모임 개요	1
II. 연구모임 활동 경과	
1. 1차 회의 (발족식 및 간담회)	7
III. 연구모임 성과	
1. 충청남도 농촌지역 신소득보장제도 적용방안 연구 결과	26

I . 연구모임 개요

I 연구모임 개요

- ◆ 기본소득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논쟁의 중심에 있는 제도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책설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 향후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실험과 검증 작업이 필요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 사업기간 : 2021년 4월 ~ 2021년 11월 (8개월)
- 사업내용
 -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
 - 연구보고서 발간, 배포

2 세부사업 계획

[1] 연구·조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학습, 토론, 사례조사 등을 위한 연구 활동
- 사업내용
 - 연구모임 구성 및 정기모임
 - 연구·조사 비용 지원 등

[2] 간담회 개최

○ 사업개요

-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사업내용

-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등
- 정기적 간담회 개최(기간 중 3회)

[3] 관련현장 방문

○ 사업개요

- 경기도 기본소득 실험대상 마을 및 충남도 장고도항 현장 방문

○ 사업내용 : 현장방문(기간 중 1회)

(현장방문 교통비, 식비 비용)

[4] 보고서 발간 · 배포

○ 사업개요 : 정책제언집 발간 및 배포

○ 사업내용 : 활동결과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3 사업추진 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2021년 1월 중)

○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1차 정기모임

(2021년 5월 중)

- 연구회 활동 방향 및 계획 논의(발족식)

-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2차 정기모임 및 현장방문
(2021년 6월 중)
 - 장고도 현장방문
-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3차 정기모임 및 현장방문
(2021년 9월 중)
 - 경기도 기본소득 실험 마을 방문
-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방향 연구모임 4차 정기모임
(2020년 11월 중)
 -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에 관한 간담회
- 조사·연구 실시(2021년 9월~10월 중)
 - 영역별 조사연구
- 보고서 발간, 배포(2021년 11월 중)
 - 연구모임 활동결과, 정책 발굴 및 제언 등

4 기대효과

- 기본소득제에 도입시 필요한 기본소득의 효과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실험 모델 제안

회 원 명 단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고
대 표	김영권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간 사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실장	
회 원	김득응	충청남도의회 의원(농수산해양위원회)	
"	김명숙	충청남도의회 의원(농수산해양위원회)	
"	양금봉	충청남도의회의원(교육위원회)	
"	윤철상	충청남도의회의원(농수산해양위원회)	
"	김용현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	명노봉	충남도 장애인농구협회 부회장	
"	김도윤	충청남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김윤아	예산군 인구증가시책위원회 부위원장	
"	안수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팀장	
"	박성연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장	
"	김진아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 사무국장	
"	정만철	농촌과자치연구소 소장	
"	안성원	디트뉴스24 정치행정부 차장	
"	이종호	충남도청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장	
"	임민호	충남도청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장	

II. 연구모임 활동 성과

Ⅱ 연구모임 활동 성과

1. 제1차 회의

- 기본소득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논쟁의 중심에 있는 제도로 정책설계를 면밀하게 구성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실험과 검증 작업 진행

□ 개최 개요

- 일시 : 2021. 5. 21.(금) 14:00
- 장소 :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112호)
- 대상 : 연구모임 회원(대표 김영권 의원 등 17명)
- 내용 : 발족식, 주제발표 및 토론
- ※ 주제 :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시 간	소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진행안내 및 회원소개)	박경철 간 사
14:05~14:10	5'	● 인사말씀	김영권 의 원
14:10~14:40	30'	● 주제발표: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 (발표자) 박경철 박사(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박경철 간 사
14:40~15:20	40'	● 토론	김영권 의 원
15:20~16:00	40'	● 총평 및 마무리 ● 간담회	김영권 의 원

□ **발제자료**(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발족식 및 1차 회의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2021.05.21)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 및 실현 방안

박 경 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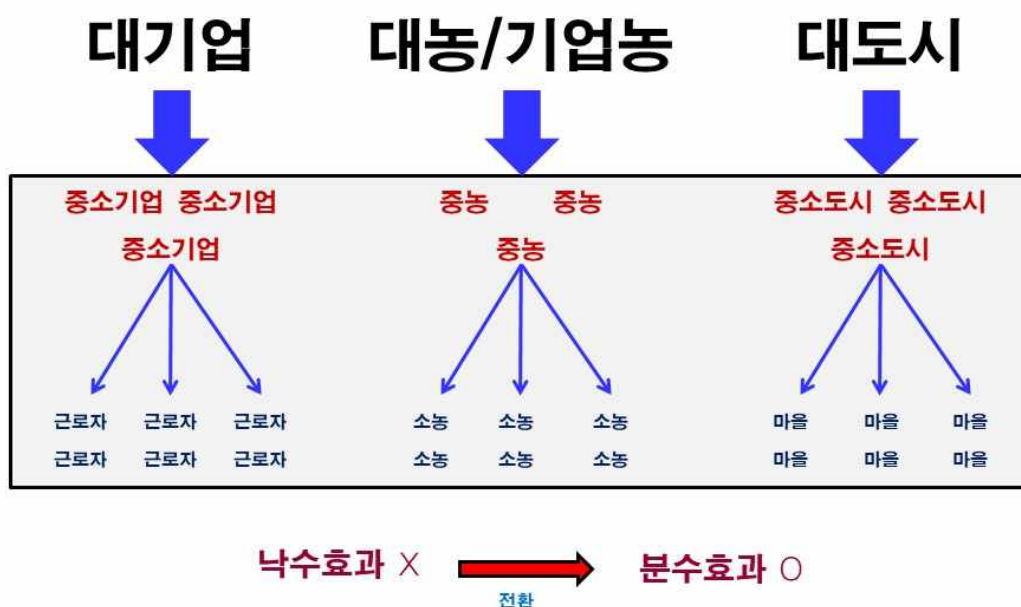
충남도의회

발표 내용

1. 농촌기본소득의 배경 및 필요성
2. 농촌기본소득의 개념 및 현황
3.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및 사례
4. 농어촌기본소득의 실현 방안
5. 농어촌기본소득의 기대 효과

1. 농어촌기본소득의 배경 및 필요성

국가발전모델의 한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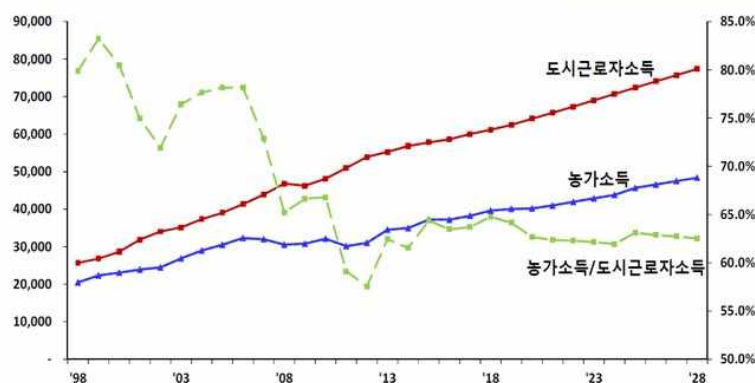
-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만성적인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 세종특별자치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건설
-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추진 중
 - 교통 등 인프라시설 확충
 - 주요 사업 예타 면제
 - 도시 재생, 생활SOC사업 등
- 하지만 농촌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국가균형발전은 불균형발전을 더욱 심화시킴
- 국가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비중이 비수도권을 초과함(2019), '지방소멸' 가속화
- 농촌의 인구 감소의 핵심은 소득 감소, 그러나 농촌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임

농업농촌의 핵심문제: 소득불평등

▪ 도농 간 소득격차 지속 확대

- 2018 64.8%→2028년 62.5% 예상

✓ 2020년 도농 간
소득격차 59.9%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9



충남지역 소멸 위험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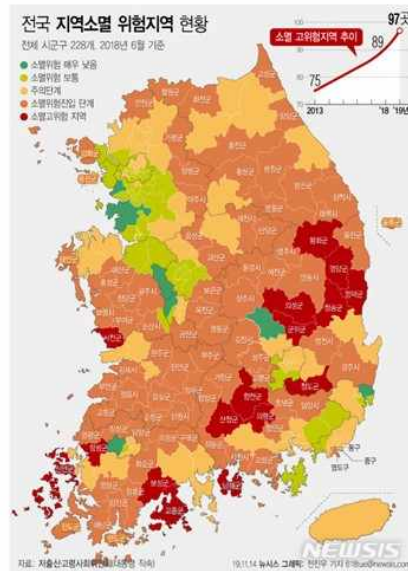
소멸위험 진입단계 0.2 ~ 0.5 미만

서천	0.210	청양	0.221
부여	0.232	금산	0.271
태안	0.280	예산	0.281
보령	0.385	논산	0.396
공주	0.412	홍성	0.46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8년

이론경제. 2019.08.26

전국 97개 지자체 인구 감소로
지도에서 사라진다.



30년 후엔 시군구 절반 없어진다... 코 앞 닥친 '지방소멸'

f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기초지자체 40%(인 105곳)이 '소멸위험지역' 11년 만에 비례 12% 더 늘어나 ... 인구는 80~90%가 사라질수도 지자체별 인구감소 위기감연일 ... 무 풀 경 등 지역통합 논의도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행동(정책)이 필요하다!**

2. 농어촌기본소득의 개념 및 현황

농어촌기본소득의 개념

✓ 정의

-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소득수준, 노동여부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5원칙: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

✓ 개념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범주형 기본소득)

- 산업화, 개방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희생되어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촌 주민에게 국가와 사회가 그들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제도

✓ 목적

- 첫째, 농어촌 주민의 기본생활권 보장
- 둘째,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의 유지 및 증진
- 셋째, 농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속
- 넷째,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실현

농어촌기본소득의 성격

✓ 좀더 ‘특별한 의미’의 기본소득

- 주요 목적

→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의 유지 및 증진, 농어촌주민의 기본생활권 보장

- 주요 성격

→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

※ 산업화, 개방화 과정에서 농어촌주민이 희생됐기 때문에 기본소득 우선 실시

농어민기본소득 → 농어촌기본소득 → 전국민기본소득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관련 법규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9항, 9조, 44조~6조
 (1)식량의 안정적 공급 (2)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3)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4)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5)생태계의 보전 (6)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농어촌주민을 ‘국토지킴이’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보상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약 252조원(농진청, 2012)



그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체계도
출처: 팜인사이트(2018.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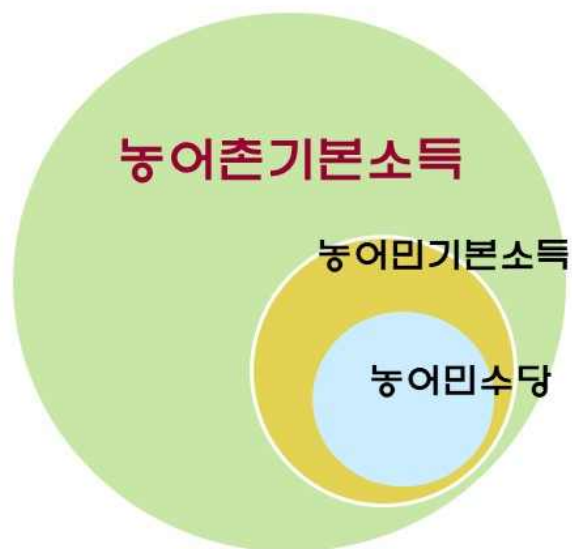
유럽의 농업직불금은
농촌 문화, 경관, 환경을 지키는 농민의 삶을 보장한다.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

- EU 71.7%, (2016) 스위스 85.5%(2016), 일본 33%(2015), 우리나라 17%(2018추정)

농어민수당, 농어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간 관계



주요 광역자치단체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추진 현황

지자체명	명칭	내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021년 도내 참여 희망 4개 시·군 농민 1인당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 지급 계획. *여주시는 2020년 농민수당으로 농가당 60만 원 지급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2021년부터 농가(10만4천 가구)당 연 70만 원 지급 예정. 양구군은 2020년 농민수당 35만 원 지급
충남도	농어민수당	2020년부터 농어가(16만5천 가구)당 연간 80만 원 지급(상반기 45만 원, 하반기 35만 원)
충북도	농민수당	2020년 9월 조례 제정, 2021년부터 농가당 50만 원 지급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조례만 제정하고 지급 대상, 금액, 시기 등 미정 *의령군 농민수당 조례 제정.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급 예정
경북도	농어민수당	2020년 조례제정, 2022년부터 지급 예정 *봉화군은 2019년 50만 원, 2020년부터 70만 원 지급 *청송군은 2020년부터 50만 원 지급, 그 외 영양군, 성주군도 농민수당 준비 중
전남도	농어민공익수당	2020년부터 농어가(24만3천 가구)당 연간 60만 원 지급 *강진군은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이름으로 2018년부터 농가당 70만 원 지급 *해남군은 2019년에 농민수당 이름으로 농가당 60만 원 지급
전북도	농민공익수당	2020년부터 농가(10만2천 가구)당 연간 60만 원 지급, 2021년부터 어가, 임가 포함
제주도	농민수당	2020년 조례 제정. 2022년 1월에 농가(5만5천 가구)에게 지급. 액수 미정

3.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및 사례

설문조사 결과

- 대상: 충남도민 327명
- 기간: 2019년 6월
- 목적: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표1. 지역별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 격차 인식 정도

구분			항목				전체
			①매우 심한 편이다	②심한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 심하지 않다	
거주지 유형	농촌	빈도	52	125	8	0	185
		%	28.1%	67.6%	4.3%	0.0%	100.0%
	도시	빈도	7	58	61	16	142
		%	4.9%	40.8%	43.0%	11.3%	100.0%
전체		빈도	59	183	69	16	327
		%	18.0%	56.0%	21.1%	4.9%	100.0%

14

표2.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 정도

구분			항목				전체
			① 매우 심한 편이다	② 심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심하지 않다	
거주지 유형	농촌	빈도	63	113	9	0	185
		%	34.1%	61.1%	4.9%	0.0%	100.0%
	도시	빈도	2	65	64	11	142
		%	1.4%	45.8%	45.1%	7.7%	100.0%
전체		빈도	65	178	73	11	327
		%	19.9%	54.4%	22.3%	3.4%	100.0%

표3.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 격차 부문

구분			항목						전체	
			①교통	②의 료·복지서비스	③교 육·문화	④행정서비스	⑤생활환경(주거환경, 상업시설)	⑥소득·일 자리		
거주지 유형	농촌	빈도	10	32	29	10	32	72	185	
		%	5.4%	17.3%	15.7%	5.4%	17.3%	38.9%	100.0%	
	도시	빈도	9	26	44	7	41	15	142	
		%	6.3%	18.3%	31.0%	4.9%	28.9%	10.6%	100.0%	
전체			빈도	19	58	73	17	73	87	327
			%	5.8%	17.7%	22.3%	5.2%	22.3%	26.6%	100.0%

14

표4.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여부

구분			항 목					전 체
			①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②찬성하 지 않는다	③보통이 다	④찬성한 다	⑤매우 찬성한다	
거주지 유형	농 촌	빈 도	0	11	16	98	60	185
		%	0.0%	5.9%	8.6%	53.0%	32.4%	100.0%
	도 시	빈 도	10	80	16	31	5	142
		%	7.0%	56.3%	11.3%	21.8%	3.5%	100.0%
전 체		빈 도	10	91	32	129	65	327
		%	3.1%	27.8%	9.8%	39.4%	19.9%	100.0%

표5. 농어촌 기본소득의 액수 정도

			항목				전체
			① 1인당 연 간 30 만 원 미만	② 1인당 연 간 30~50만 원 미만	③ 1인당 연 간 50~100 만원 미만	④ 1인당 연 간 100만원 이상	
거주지 유형	농촌	빈도	9	58	93	25	185
		%	4.9%	31.4%	50.3%	13.5%	100.0%
	도시	빈도	40	61	34	7	142
		%	28.2%	43.0%	23.9%	4.9%	100.0%
전체		빈도	49	119	127	32	327
		%	15.0%	36.4%	38.8%	9.8%	100.0%

14

사례1: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새로운 경기
광정환 세상

경기도, 2021년 농촌지역 국내 첫 기본소득 실증 실험



- ① 사회실험 설계 용역 '지역재단', '녀름연구소' 선정
- ② 올해 6월 10일 착수 보고회 완료
- ③ 올해 10월말까지 성과지표,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 및 인원수 등 제시 예정
- ④ 연말까지 실험마을 선정
- ⑤ 내년부터 사전 실험조사 후 기본소득 지급 예정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OECD 36개 가입국 중 **경기도가 최초 시행**

[illegible]

사례2. 충북 옥천군 안남면: 금강수계기금으로 주민자치 구현

대청댐 상류 위치 안남면:

매년 나오는 금강수계기금을 활용 주민자치와 자립 구현



사례3: 충남 어촌계 기본소득 형태의 마을연금 지급

태안군 만수동, 보령시 삼시도 어촌계 등

마을 공동의 자산 = 어족자원
공동작업 = 균등 분배
노인, 장애인 등 마을주민에게도 분배



어르신 노후 보장
어족자원의 보존
귀어촌 인구의 증가



2020.11.13 보도

✓ 경쟁과 독점이 아니라 협동과 배려로
기본소득의 기본이념을 실천한 좋은 사례

4. 농어촌기본소득의 실현방안

농어촌기본소득의 실행 방안

✓ 방법

- 충남도내 면 또는 군단위 시범사업 실시(전국단위: 면 → 읍으로 확대)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 효과 나올 시 국정과제 제안

✓ 대상 지역 및 대상자

- 1)인구감소 심각지역
- 2)환경 피해 및 보전 지역

✓ 대상자

- 해당지역 전체 실거주자: 남녀노소, 소득구분, 직업구분 없이 모두에게 지급
- 공공기관, 교육 관련 종사자 및 퇴직자에게도 지급(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심사)
- 연금 및 복지수당 수급과 충돌 시 선택 유도

농어촌기본소득의 실행 방안

✓ 지급액

- 1인당 월 10~20만원

✓ 지급 방식

- 소멸성 지역화폐(지류, 전자화폐 등)

✓ 지급기간

- 시범사업인 경우: 2~3년
- 실제 추진할 경우: 제한 없음

✓ 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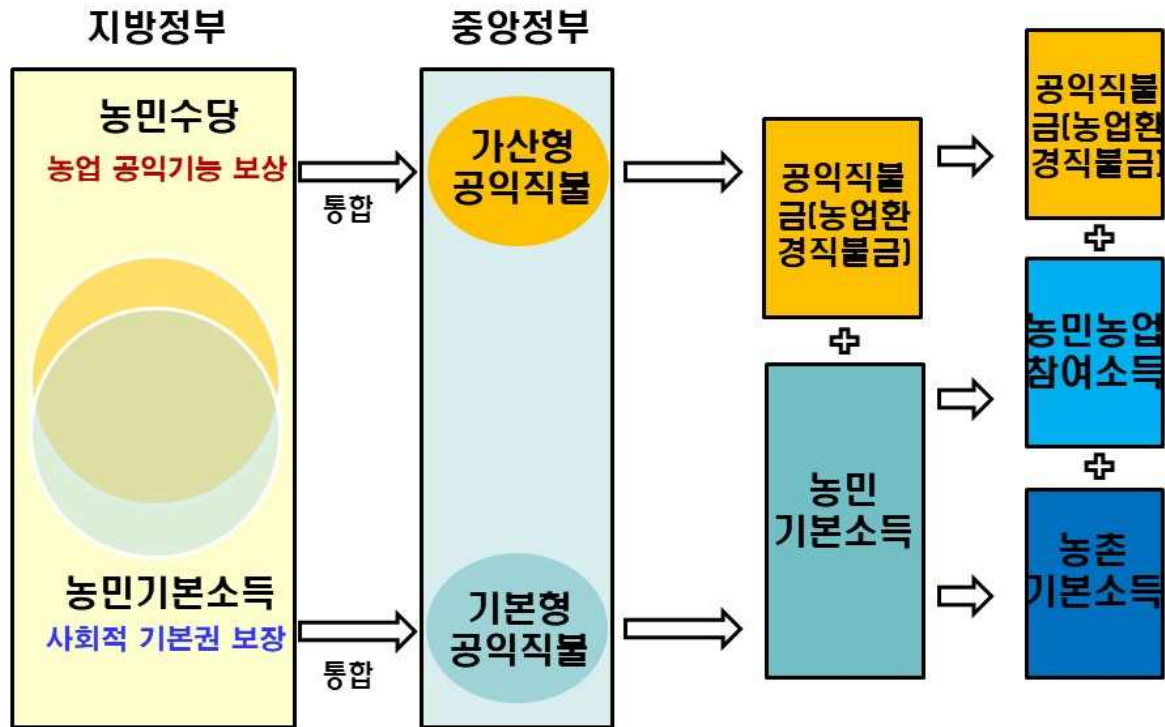
- 지자체: 지역개발사업비, 인구관련 사업비
- 중앙정부: 군특예산, 지역개발, 인구

✓ 실행주체

- 지자체: 농정, 인구정책, 정책기획 관련 실국
- 중앙정부: 총리실, 국토부, 행자부, 농식품부없음

적용사례: 청양군

행정구역 (읍면)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20 증감률
합계	32,485	32,753	32,837	32,296	31,717	30,948	-4.7%
청양읍	10,424	10,532	10,489	10,465	10,273	10,023	-3.8%
운곡면	2,306	2,310	2,313	2,258	2,218	2,162	-6.2%
대치면	2,293	2,310	2,319	2,285	2,292	2,276	-0.7%
정산면	3,726	3,771	3,783	3,700	3,614	3,598	-3.4%
목면	1,583	1,592	1,666	1,611	1,594	1,532	-3.2%
청남면	2,049	2,053	2,062	2,041	1,970	1,927	-5.9%
장평면	2,640	2,618	2,584	2,495	2,423	2,335	-11.7%
남양면	2,882	2,929	2,930	2,862	2,846	2,767	-3.9%
화성면	2,353	2,375	2,420	2,334	2,256	2,200	-6.4%
비봉면	2,229	2,263	2,271	2,245	2,231	2,128	-4.5%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 발전체계도

전국민기본소득과의 관계

✓ 전국민기본소득

- 1인당 월 3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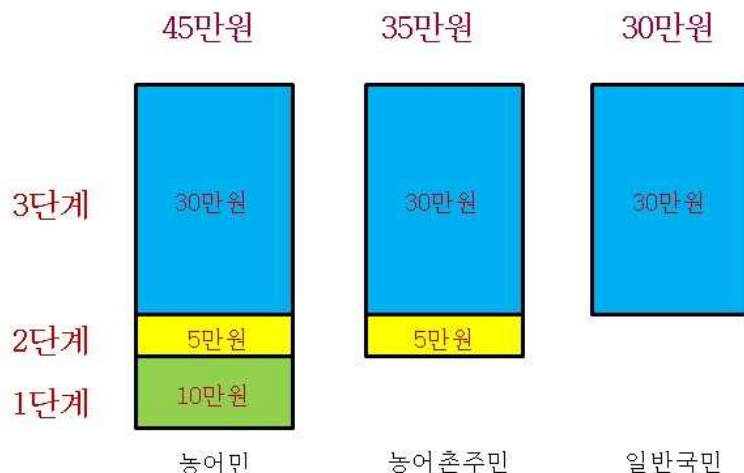
향후 5~10년 내 전국민기본소득, 농어촌기본소득, 농어민기본소득 실현 시 가정에 산정

✓ 농어민기본소득

- 1인당 월 1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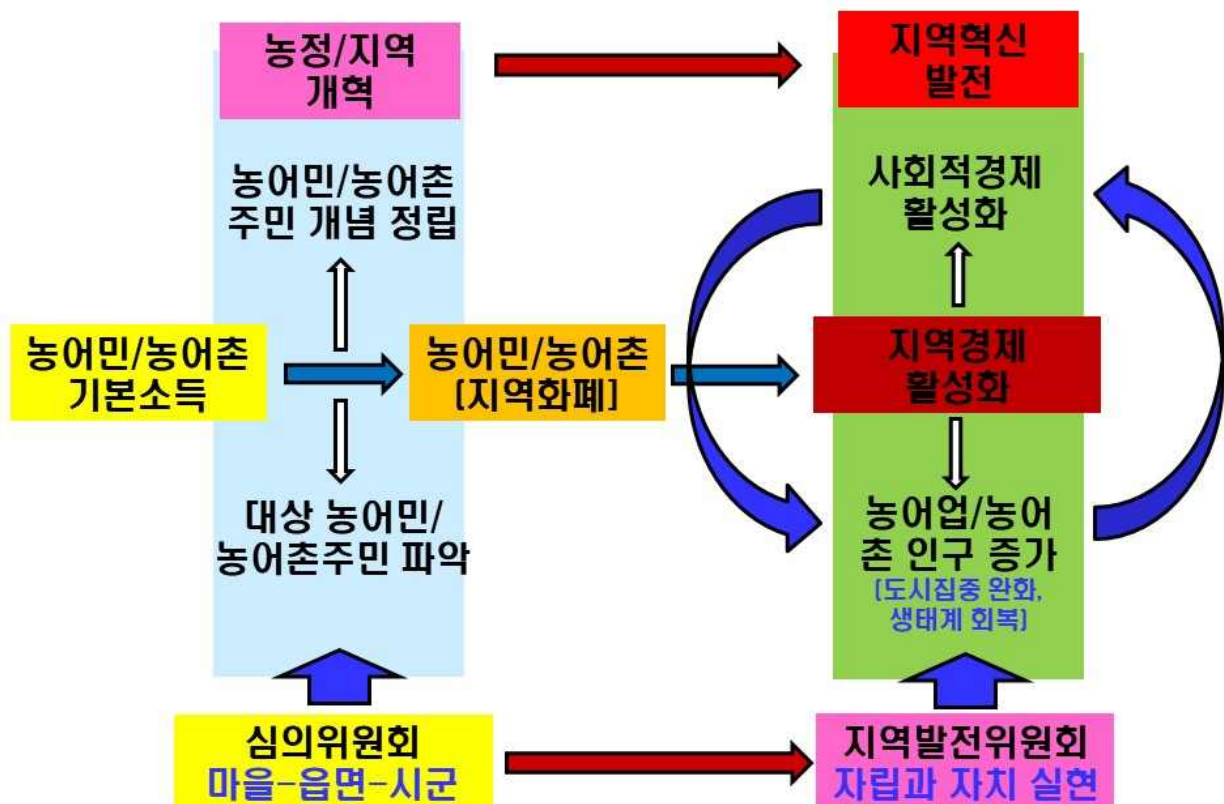
✓ 농어촌기본소득

- 1인당 월 5만원



5. 농어촌기본소득의 기대 효과

농어민/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모델



기본소득은 물과 같다: 물은 낮은 데로 흐른다.
上善若水(老子):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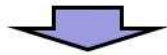


물
 (기본소득)



물(기본소득)을 통한 상호조정
 과정을 거쳐 함께 성장

현재 농업과 농촌의 상황



지난친 선별과 집중으로
 인해 대다수는 고사 위기

벼가 평등하게 자라듯
 사람도 평등할 수 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大同세상)

감사합니다!!

중앙매일

2021년 05월 24일
15면 (종합)

충남형 기본소득제 실증실험 방안 만든다

김영권 도의원 대표 '충남형 기본소득제 농어촌대상 정책실험모델 설계 연구모임' 발족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농어촌지역을 대상 기본소득모델연구모임 기념촬영.

충남도의회가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실험 방안을 만든다.

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1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본소득제 효과 검증과 사회적 합의 유도를 위한 사전 검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인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을 대표로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 중인 김득응(천안1·더불어민주당)·김명숙(청양·더불어민주당)·양금봉(서천2·더불어민주당)·윤철상(천안5·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여기에 충남도 관계부서와 충남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사회적농업 중부지원센터, 마을학교, 언론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관 전문가까지 모두 18명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회원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 모임 간

사인 충남연구원 박경철 사회통합연구실장으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주제발표를 청취하고 기대효과와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권 의원은 "지난해 연구모임을 통해 기본소득이 향후 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임을 확인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여러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도입 전 실험과 검증과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도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지역의 기본소득 정책실험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도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소득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등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오천수 기자

(11.6*20.6)cm

□ 연구모임 활동 사진



Ⅲ. 연구모임 성과

Ⅲ 연구모임 성과

1. 충청남도 농촌지역 신소득보장제도 적용방안 연구용역

< 연구 내용 요약 >

1. 연구 개요

□연구의 배경 및 목표

- 농업·농촌의 구조적 위기 해결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및 정책 마련 필요
 - 농촌 소멸 위기, 농가 소득의 정체 및 양극화, 도농 간의 소득 격차 등의 농업·농촌의 구조적 위기 지속
 -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직불금제 개편, 농어가 수당 정책이 실행되고, 농민 기본소득 법제화, 농촌 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이 제안·논의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소득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특히,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농촌(주민) 기본소득’에 주목하며,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최근 농촌의 잠재력에 근거하여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농촌 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특히, 기후위기 대응, 코로나 19 이후 저밀도 경제, 분산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이 핵심 공간으로 조명 받고 있음
 - 농촌기본소득은 다양한 정책 융합(policy mix) 속에서 농촌 재생의 새로운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향후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 ‘충남의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방안’은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실증적 방법이 될 것임

□연구 방법

- 현 농업·농촌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평가 및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도입에 관한 지역별 의견 수렴 간담회
 - 현 공익직불금, 농어가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에 관한 농민과 농촌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청남도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간담회 개최
 - 간담회 개요
 - 아산(8월 3일), 태안(8월 10일), 홍성(8월 11일), 부여(8월 12일) 등 4개 지역에서 농민, 농촌주민, 충남도 및 시·군 농정 담당 공무원 등 참석. 공익직불제, 농어가 수당 평가 및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도입(사회실험) 방안 등에 관한 논의



- 또한, 충청도민들의 농업·농촌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인식 파악을 위해 ‘충남 농촌기본소득에 관한 설문조사’ 진행

- 설문조사 개요

- 공익직불금, 농어가 수당,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농촌기본소득 도입, 농촌기본소득 도입시 농촌 거주(이주) 의향 등에 관한 의식 조사 진행

구 분	내 용
조 사 일 시	2021년 8월 20일(금) ~ 27일(금)
조 사 방 법	유선 전화 면접조사 100%
유 효 표 본	600명(충남, 도시 거주 주민 300명과 농어촌 거주 주민 300명)
표 본 오 차	95% 신뢰수준에 $\pm 4.0\%$

2. 연구의 결과 및 제언 사항

□연구 결과

1) 농업·농촌의 소득보장 제도의 맥락

- 소득보장 제도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분배 및 재분배 정책 중 현금(성) 급여에 관한 정책 및 이의 제도화’로 정의
 - 소득보장 제도 정당화의 두 가지 계기
 -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 :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의 합의. 통합적 정책패키지로서 모든 사람들의 생애주기에 걸쳐 소득 보장과 지원을 제공 필요(사회보호를 필요로 하는 누구라도 사회적 보호체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는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의 기초가 됨
 - 분배정치, 현금 이전의 확산 : 빈곤 해소와 사회적 보호 정책으로 분배 정책의 중요성 부각. 또한 분배 정책에서 비기여 현금 지급(non-contributory cash transfer)이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확산
- 농업·농촌의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는 직불금제, 농어가 수당,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임¹⁾. 직불금제는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었으며, 지자체 수준에서 농어가 수당

(농민수당)이 실행되고 있음

- 최근 공익직불금제와 농민수당 제도의 실천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의 문제점을 지적·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농민 기본소득 법제화’ 및 ‘농촌 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대두

- 농민기본소득 도입 필요성(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표-1>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기본내용

구 분	세부 내용
농민기본소득 필요성	· 농업이 소멸하면 공동체 생존을 위협 · 대다수 농민이 농사를 지어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움 ·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보전할 필요 · 과밀화된 도시 인구를 농촌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냄
농민의 정의	· 3년 이상 해당 시·군 실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민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했어도 3년 이상 거주,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과 농업 노동자 · 해당 시·군에서 10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은퇴한 65세 이상의 농민과 농업 노동자
농민기본소득 액수	· 1인당 월 30만원부터 시작
공익직불제와의 차이	· 소농직불제는 금액이 너무 적고, 대농 위주의 면적직불금이 여전히 중심에 있음 · 농촌진흥지역 안팎의 단가 차이가 큰 것도 문제 · 쌀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농업소득 감소를 벌충할 필요가 있음
농민수당과의 차이	· 농민수당은 지자체 차원의 사회수당, 농민기본소득은 국가 단위 범주형 기본소득임 · 농민기본소득은 개인단위, 농민수당은 호당 단위로 지급 · 농민기본소득 지급액은 농민수당보다 많아야 함

1) 다양한 경영안정 지원 제도 중 직불제 형태 집행 사업. 기타 직불성 사업으로는 농어민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촌 보육여건 개선, 취약 농가인력 지원 등이 있으나, 이들은 직접적인 소득 지원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농민 기본소득 관련 입법 논의 현황

<표-2>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관련 입법 제안 현황

주체(소속)	법안 내용	지급대상 금액(연)	중앙 정부 재정 부담
윤준병의원 (더불어민주당)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 발의	농어업인 120만원	50~90 %
박덕흠의원 (전 국민의힘)	농업인 기초연금 법안 발의	농가당 120만원	40~90 %
이만희의원 (국민의힘)	농어업인 기초연금 법안 발의 (65세 이상, 10년 이상 종사 농어업인)	농가당 120만원	100%
허영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민기본소득 법안 발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영농조합 법인 1년 이상 소속된 농업 종사자)	농어업인 (월) 30만원	100%

- 농촌기본소득 : 소멸위험이 있는 농촌지역 주민에게 소득 유무, 노동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또는 현금성 지원금

<표-3>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의 차이

구 분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목표/지향	·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성 ·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마중물	
대상	농민(농업종사자)	농촌주민(비농민 포함)
주요 관점	· 농민의 기본권(생존권) · 농업의 생태적 전환	· 농촌소멸 방지(농촌재생) · 국가균형발전
예산(월 30만원)	8조 원 (농가인구수 2,244,783명)	16조6천억 원 (농촌인구 4,609,011명)

- 기본소득론으로의 접근 이유

- 기본소득론이 지닌 장점 즉, 보편적 권리에 근거한 정기성, 무조건성, 개별성, 현금 지원 등의 원칙에 따라 농업·농촌의 위기 및 소득 문제 해결의 직접적 방안이 될 수 있음
- 농업·농촌에 한정된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농업·농촌의 위기 상황과 농업·농촌이 갖는 공공재 및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가능성이 있음

2)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평가와 기대

○ 공익직불금제와 농어가 수당 현황

- 농정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공익 직불제로의 개편
- 직불금은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줄이거나, 영농활동 성과를 보완하는 방식에서 공익기능 증진을 장려하는 보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

<표-4> 공익직불금 개편 형태

개편 전		개편 후		
경관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쌀소득보전 직불제 : 고정, 변동 밭농업 직불제 : 고정, 논 이모작	⇒	선택형 공익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논활용 직불제	
			면적 직불제 (역진적 단가)	
		기본형 공익 직불제	소농 직불제(정액)	

출처: 유찬희·김태영, 2020.

- 공익형 직불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하고, 기본형은 소규모 농가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이루어짐
- 소농직불금은 지급 대상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이고 농외소득이 4,500만원, 축산업 소득은 5,600만원 미만 등 7가지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경작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 지급
- 그럼에도 공익형직불금은 실질적으로 면적 보상의 성격이 강함. 소농직불금은 22%, 면적 직불금(작물 생산면적에 대한 보상)이 전체 직불금의 74.7%를 차지함

<표-5> 2020년 공익형직불금 현황(총 2조 3,564억 원)

기본형	2조 2,769억 원	선택형	795억 원
소농	5,162억 원	친환경	240억 원
면적	1조 7,607억 원	경관보전	89억 원
		논활용	466억 원

출처: 김찬휘, 「농민기본소득은 농촌기본소득의 현실태이다」,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2021, 84쪽

- 지자체 중심의 농민수당

- 목적과 취지 :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충남도 농어가수당 조례 제1조)

· 전국 농민수당 실시 현황

<표-6> 광역 지자체 농민수당 지급 현황

지자체	대상(명)	예산(원)	지급액(원)	시기
전남	24만3,000	1,459억	연 60만	2020
충남	16만5,000	1,320억	연 80만	2020
전북	10만2,000	613억	연 60만	2020
강원	8만9,000	625억	연 70만	2021
충북	19만8,000	544억	연 50만	2022
경기	23만	352억	분기별 15만	2021,4분기
제주	5만6,000	224억	연 40만	2022년

*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농민 개인별 지급

- 충남 농어가수당 현황(2020년) : 총 농어가 155,280호 지급. 지급액 125,466,450천 원(사업비 부담비율 : 도비 40%, 시·군비 60%)

o 소득보장 제도의 성과 : 충남의 농업·농촌 현황 변화(2020년)

- 농가 인구 감소, 농가 소득 정체, 농가 소득 양극화의 장기적 추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2020년에 들어 농가 인구 및 농가 소득의 소폭 증가 등 여러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

- 이는 최근의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층의 귀농·귀촌 증가와 더불어 각종 소득 보장 제도의 효과로 평가
- 공익직불금으로의 개편에 따른 소농직불금제와 농어가 수당 정책의 도입은 직접적인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면서 전체 농가 인구의 증가, 농업 경영체 증가, 고령화 감소, 농가 소득 불평도의 감소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9년까지 충남의 농가 수 및 농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농가 수와 농가 인구는 소폭 증가하고 고령화 비율도 감소²⁾

<표-7> 충남 농가 수 및 농가 인구 연도별 현황

(단위 : 호,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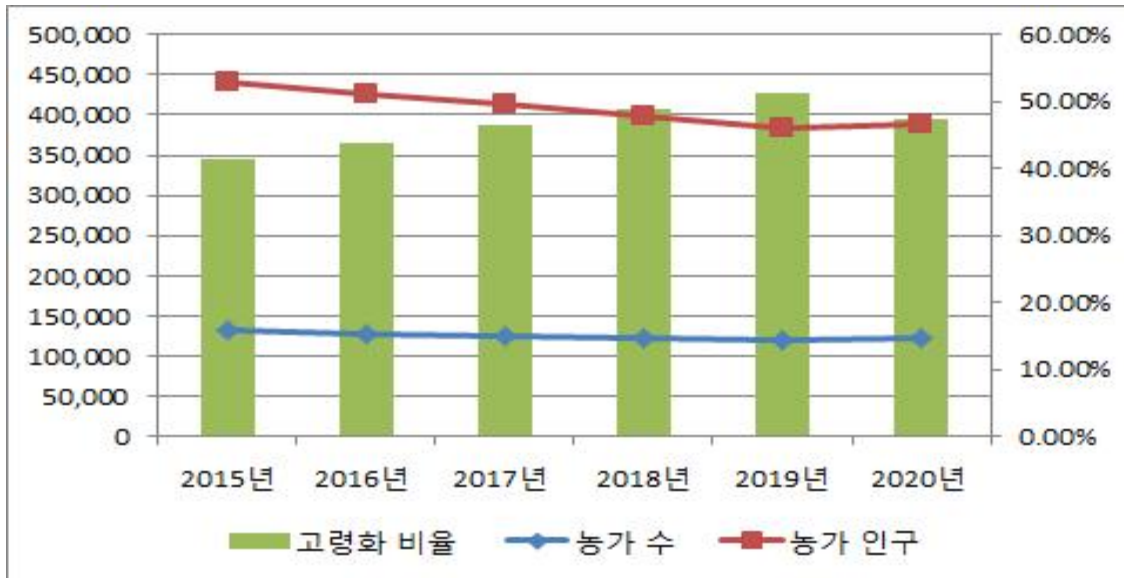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농가 수	132,008	128,275	125,886	123,480	119,903	122,184
농가 인구	308,455	296,801	288,800	276,426	263,124	266,755
65세 이상 농가인구	128,117	129,759	133,966	135,284	134,990	126,442
고령화 비율	41.5%	43.7%	46.4%	48.9%	51.3%	47.4%

- 2020년 충남의 농가 인구는 26만6천8백 명. 이는 2015년 대비 4만1천7백명 (13.5%p) 감소한 수치이나, 2019년에 비해서는 농가 인구는 3,631명(1.4%p) 증가
-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역시 2020년 47.4%로 2019년 51.3%에 비해 3.9%p 감소

2) 2020년의 농림어업조사결과는 잠정적 조사결과임을 고려

<그림-1> 충남 농가 수, 농가 인구, 고령화의 연도별 추이

(단위 : 호, 명, %)



<표-8> 충남 농업경영체 현황

(단위 : 건, ha)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영체수	182,357	184,184	186,342	187,312	188,524	193,926
노지면적	214,156	212,135	208,935	207,633	203,398	201,324
시설면적	11,462	11,907	13,105	12,860	13,113	13,218
농업인수	301,324	296,724	284,791	282,152	280,362	284,600

- 2020년 충남의 농업경영체 수는 193,926건으로 작년대비 2.8% 증가. 이는 전년도 대비 2019년 0.6%, 2018년 0.5% 증가폭을 크게 상회
- 농업인수는 2015년 대비 매년 감소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증가. 2020년 284,600 명으로 2019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충남의 농업 경영체 수와 농업인 수가 그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증가한 점은 농업 경영체 등록이 공익직불금 및 농민 수당의 지급 기준인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20년 충남의 농가 소득은 4,564만원. 전년 대비 3.6% 증가. 특히 이전소득은 2019년 대비 20.1% 증가

- 농가소득의 구성비는 농업외 소득 35.1%, 이전소득 30.8%, 농업소득 29.3%, 비경상소득 4.7% 순임

<표-9> 충남 연도별 농가소득 현황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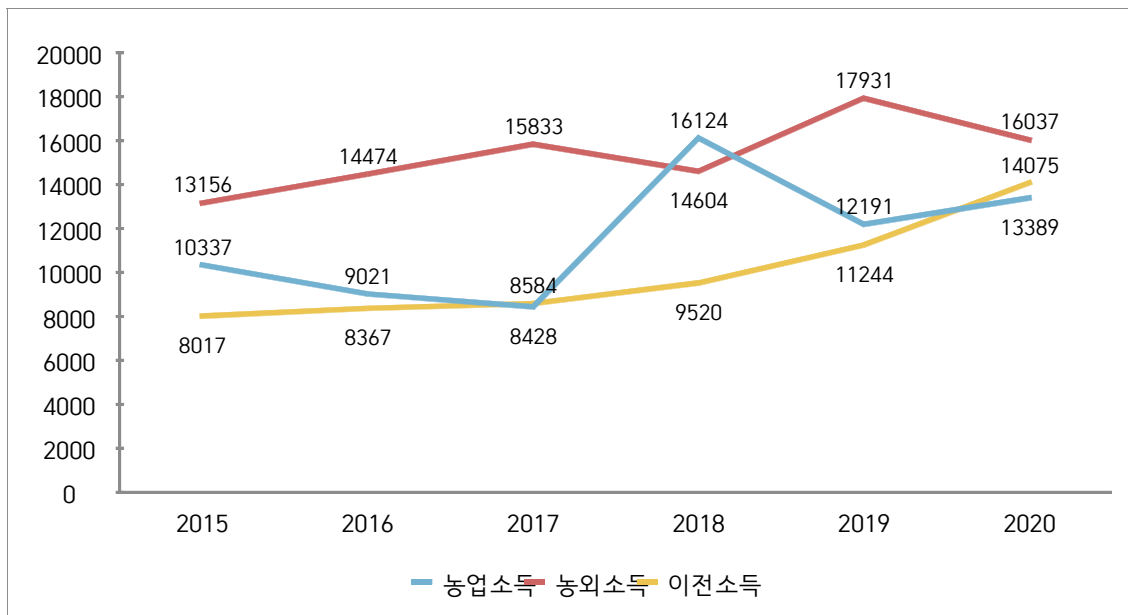
년도	계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2020	45,643	13,389	16,037	14,075	2,141
2019	44,019	12,191	17,931	11,244	2,653
2018	43,509	16,124	14,604	9,520	3,261
2017	36,039	8,428	15,833	8,584	3,194
2016	34,963	9,021	14,474	8,367	2,810
2015	34,717	10,337	13,156	8,017	3,208

출처: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충남농업기본통계

- 2020년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 이전소득은 증가하고 농업외 소득은 소폭 감소. 2019년 대비 농업소득은 8.9% 증가한 반면, 이전소득은 20.1%(2백83만1천원) 증가

<그림-2> 충남 농가소득 구성부문 연도별 추이

(단위: 천원)



- 농업소득 증가보다 이전소득의 증가가 더 커 2020년에는 이전소득이 농업소득보다 큰 비중을 차지

○ 현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 의견

- 농촌의 양극화, 고령화 해소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 지원 제도 강화가 필요
-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은 상호 보완적, 둘 다 필요
- 농민·농촌기본소득의 예산은 농업 관련 예산이 아니라 사회보장 예산 등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함
- 직불금과 농어가수당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기본 조건임. 현실은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도 직불금과 농어가수당을 받지 못하는 정책의 소외층이 존재
- 적은 규모의 농사짓는 농민, 임차농 등의 경우 정책 대상에서 배제 우려
- 농지의 60% 가량을 부재 지주가 소유하고 지주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등 농지문제가 있는 상황. 특히, 젊은 층이 귀농하여 농지를 확보하거나 임대하기 어려움. 농지 실태조사 및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여성 농민의 경우 소외되어 여성 농민의 직업적 가치가 배제됨. 여성 농민은 농사와 더불어 돌봄 노동이라는 이중의 역할에 놓여 있음. 여성 농민의 직업적 가치가 존중받고 소외됨이 없는 농민기본소득이 되어야 함
- 농촌기본소득은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조건이 없어 선별의 어려움이 없으며, 농촌에 거주하고 농업외 직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농촌의 기준과 농촌기본소득 제공의 대상을 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많은 노력이 필요

○ 소득보장 제도에 대한 충남도민의 인식

- 설문 항목 조사 결과

<표-10> 농업·농촌 환경 및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 %)

	긍정/동의	부정/반대	잘 모름/유지
최근 농업·농촌의 개선	48.8	25.2	24.5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지원	68.5	7.0	22.7
농업농촌의 공익 기여	53.0	9.7	36.7
공익직불금	65.5	13.5	21.0
충남 농어가 수당	65.3	18.2	16.5
농민 기본소득	51.5	31.0	17.5
농촌 기본소득	56.8	29.2	14.0
농촌 거주 의향	49.3	23.3	25.5

- 농업·농촌의 주요 소득지원 정책에 대해 긍정적이며 지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금과 충남의 농어가 수당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논의 중인 농민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 정책에 관해서는 대략 30% 가량의 상대적으로 높은 반대 의견 표출
- 농촌 기본소득의 지급 적정 액수는 1인당 월 30만원 이상이 28.8%, 1인당 월 10만원~30만원 정도는 26.8%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30만원 정도의 선호를 나타냄

- 농촌과 도시 주민간의 인식 차이

<표-11> 농촌과 도시 주민들의 긍정적 인식 비교

(단위 : %)

	농촌	도시
최근 농업농촌의 개선	50.8	48.3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지원	69.0	70.5
농업농촌의 공익 기여	55.9	50.8
공익직불금	68.3	62.7
충남 농어가 수당	66.0	64.7
농민 기본소득	58.0	45.0
농촌 기본소득	63.7	50.0
농촌 거주 의향	64.3	36.3

- 대체적으로 농촌주민들의 지지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지만, 큰 차이는 없어 소득 보장 정책에 관해 도농 간의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

- 농촌기본소득 도입 시, 농촌 이주(거주) 의향 교차 분석

<표-12> 농촌기본소득과 농촌 이주(거주) 의향 교차 분석

구분		[농촌기본소득 도입 시 농촌 이주(계속 거주) 의향](%)		
		보통이다	없다	있다
농촌기본소득 의견	전혀 동의하지 않음	13.5	50.0	36.5
	동의하지 않음	28.3	45.5	26.3
	동의함	34.0	17.7	48.3
	적극 동의함	14.0	5.4	80.6
	잘 모름	33.3	17.9	48.7

-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의 농촌 거주 의향은 48.3%, 거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7.7%로 나타남
- 특히,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적극 찬성한 응답자의 경우, 80.6%의 매우 높은 농촌 거주 의향을 나타냄

- 조사결과 시사점

- 최근 농업과 농촌의 변화, 농업과 농촌의 미래, 공익적 기능, 제반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
-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은 서로 대립적이지 않음. 일부 농촌 소득보장 정책 관련 연구에서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을 대립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 조사결과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서로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농촌기본소득 도입의 찬반 의견과 농촌 이주 및 계속 거주 의향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³⁾를 보여 실제 농촌 기본소득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농촌 이주 및 거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농촌기본소득

○ 농촌기본소득의 의미와 목표

- 농촌기본소득은 농민수당과 같은 소득지원 정책이지만, 그 의미는 기본소득의 대상을 농민에서 농촌주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범주의 농촌 정책
- 농업정책보다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공간(농촌)에 먼저 시행하는 균형발전으로서 의미
- 농촌기본소득 정책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이자 균형발전의 새로운 정책 대안
- 그간 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 기업유치, 혁신도시 건설 등의 중심으로 농촌과는 유리된 채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 이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지방소

3) 설문조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농촌기본소득 도입과 농촌 이주(거주)의향의 상관관계수 값은 .304**($p < .01$ **)으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남. 즉 농촌기본소득에 관한 지지가 높을수록 농촌 이주의향이 높다는 점을 보여줌

멸과 농촌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의 정책으로서 ‘농촌 재생’의 새로운 비전이 요구됨.
아울러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재생’의 핵심적 정책으로 추진 필요

○ 농촌 재생 : 지방소멸 및 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문제 : 농촌의 배제

- 국가균형발전의 지속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소멸의 위기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지역불균형 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님. 비수도권내의 소지역 불균형과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등 지역불균형은 다층적 문제임
- 충남의 경우, 수도권과의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천안·아산·당진·서산의 북부권과 나머지 권역간의 불균형, 시·군내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불균형 등 3중적 불균형 구조에 놓여 있음
- 그간 도시재생의 정책은 활성화되었으나, 농촌재생은 독자적 범주의 정책 설계가 부재. 또한 농촌정책은 농업정책, 산업정책의 하위 부문으로 접근되어 농촌 주민과 농촌에 관한 정책이 없어 농업정책으로 묶임

- 지방소멸

-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⁴⁾ : 지방소멸로 2040년까지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에 약 반수에 해당하는 896개의 지자체가 사라질 것, 이를 ‘소멸가능 지자체’로 분류하고 특히 인구추계 1만 명 이하의 523개 지자체(전체의 약 3%)가 소멸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그 지역명을 공개, 큰 파장을 일으킴
- 마스다 분석의 특징은 인구감소와 동경일극 집중 문제를 연계. 즉, 기존의 인구문제 접근법이 저출산 및 낮은 혼인율에 근거. 마스다 분석에서는 사회적 이동 변수 추가. 동경이 지방의 인구를 흡수하는 것과 더불어 동경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동경이 일본 전체의 저출산과 소자녀화에 박차를 가하는 구조임을 지적

4) 마스다보고서란 2014년, 일본창성회의 좌장 마스다 히로의 ‘소멸 자치체 리스트 및 스톱 소자녀화·지방활력 전략 보고서’를 말함. 마스다보고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인구감소, 과소지역, 유지불가능, 한계촌락’이란 이름 대신 ‘소멸 가능 지자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개별 지자체 이름을 거명하여 많은 논쟁을 일으킴

- 이에 따라 동경으로 집중되는 인구의 블랙홀 현상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인구 30~50만 수준의 지방 중핵도시 육성을 제안. 또한, 이러한 분석에 따라 일본은 ‘마을·사람·일 창생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한국의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방소멸위험지수’⁵⁾에 근거 매년 지방소멸 보고서 발표. 2047년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이 되고, 이 중 소멸 고위험지역도 157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20년 전국 250개 시·군·구의 41.2%가 지방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됨

<표-13> 연도별 지방소멸위험 시·군·구 현황

	2000년		2010년		2020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소멸 고위험	0	0	0	0	22	8.8
소멸위험 진입	0	0	61	24.3	81	32.4
소멸 주의	62	25.2	53	21.1	94	37.6
소멸위험 보통	35	14.2	54	21.5	43	17.2
소멸위험 낮음	149	60.6	83	33.1	10	4

* 소멸위험 진입(0.5 미만 ~ 0.2)

- 지방소멸론의 양면성 : 지방소멸 위기론은 지방의 심각한 문제 상황을 공론화 시킨 장점이 있는 반면, 실제 마을이 소멸하거나 성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위험성이 있음. 실제 ‘지방소멸위험지수’라는 단일의 인구지표로만 지방소멸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일본의 마스다 모델에 대해서도 지방소멸의 기준이 모호하며, 마스다 보고서의 지방중핵도시 육성과 압축도시 건립의 대안이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른 과소 농산촌 철퇴론으로 귀결될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 인구 감소를 경험한 선진 G7 국가들의 농촌 인구 변화를 보면, 반드시 농촌인구 절대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님.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5년 이후부터 농촌인구가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초고령화 지역이지만 성장하는 지역이 적지 않음. 균형있는 시각으로 새로운 대안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

5) 지방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로 나눈 값. 0.5 미만일 경우 소멸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 소멸위험지수가 0.2미만일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

- 농촌재생 : 지방소멸의 대안

- 농촌인구는 2015년 무렵부터 증가 추세로 반전.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곳은 전체 농촌 시군의 절반이 넘는 70개(51.1%)

<표-14> 과거 농촌 인구 전망치와 실제 인구 변화 추이 비교

(단위 : 천 명, %)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과거 인구 전망	-	-	8,072	7,366	6,790
실제 농촌인구 추이	9,343	8,704	8,627	9,014	9,255

“송미령·성주인, 2006. “도시민의 농촌지향 수요와 농촌의 미래상”, 『농업전망2006(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9쪽.

출처 : 성주인·한이철·민경찬, “농촌정책의 새 지평, 농촌재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 2010년 이전에 제시된 농촌 인구 전망치와 2010년대 이후 실제 농촌 인구 사이에는 100~200만 명 이상 큰 격차가 나타남
- 장래 농촌 인구는 2015년 936만 명에서 2040년 1,015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 물론 전체적으로 농촌인구는 증가하지만, 시군 유형에 따라 큰 편차가 나타날 것임. 근교에 위치한 도농복합시와 군은 증가 예상하지만, 원격지역 도농복합도시와 군은 감소 전망

<표-15> 장래 농촌 인구 전망

(단위: 천 명)

구 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연평균 증가율(%)	
					2015-30	2030-40
농촌	9,359	9,800	10,164	10,148	0.6	0.0
- 읍부	4,626	4,844	4,993	5,058	0.5	0.1
- 면부	4,733	4,956	5,171	5,089	0.6	-0.2
도시(동부)	41,593	41,730	41,639	40,433	0.0	-0.3
전국	50,952	51,530	51,803	50,581	0.1	-0.2
농 촌 비 중 (%)	18.4	19.0	19.6	20.1		

출처 : 성주인·한이철·민경찬, 2021, 50쪽.

- 농촌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의 위상 지님. 농촌은 국토의 대부분 (89.3%)을

차지, 인구의 18.7% 거주, 전국 162개 시·군 중 138개(85.2%)에 읍·면이 포함 (2019년말 기준)

- 도시와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무대로 농촌을 바라보는 인식 확산.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남. 코로나19 이후 저밀도사회 지향, 분산 거주, 半農半X 등 농촌형 라이프 스타일 선호 높아질 전망
- **농촌지역의 인구 증가 잠재력⁶⁾은 도시지역에 비해 높음.**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 결과, 군 지역의 지수 값은 1.68로 시(1.11), 구(0.89)보다 높게 나타남. 즉 군 지역이 시 지역 및 특광역시보다 인구의 증가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농촌의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 발전 추세. 최근 농촌의 지역총생산 증가세가 도시 지역을 앞지름. 2011년~2016년의 5년간 저밀도 지역의 지역총생산 증가율은 19.2%, 도시지역은 14.8%

<표-16> 지역유형별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현황(2011-2016)

지역 구분	지역내 총생산(백 만원)		
	2011년	2016년	증감율 (총합 기준)
도시지역	1,124,197,576	1,290,372,223	14.8%
저밀도 경제 지역	173,174,661	206,480,312	19.2%
- 도시연계 저밀도 경제지역	129,458,635	158,008,765	22.1%
- 원격 농촌지역	43,716,026	48,471,547	10.9%

출처 : 정도채 외, “저밀도 경제기반의 농촌산업 활성화 방안”, 2019. 재인용

- 귀농·귀촌의 증대. 2020년 전체 귀농·귀촌인수(동반 가구원 포함)는 49만4,569명으로 전년 대비 3만3,924명(7.4%) 증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량이 많이 증가, 2019년 대비 2만8,967명 많은 농촌 순유입자가 발생. 또한,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의향은 감소했다는 응답(8.2%)보다 증가했다는 응답(20.3%)이 높음(성주인·한이철·민경천, 2021)

6) 지역재생력지수로 측정,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는 가를 봄. 2자녀이상 출생률(1년간 총출생아 중에서 2자녀 이상 비율)/출산가능인구비율(총 여성인구 대비 가임여성인구). 2020년 지역재생잠재력지수 상위 50위에는 충남의 청양군 19위(2.01), 서천군 29위(1.79), 태안군 34위(1.74), 부여군 36위(1.73)에 속해 있음. 이는 인구소멸위험지역이라 불리는 농촌은 인구의 재생력 측면에서 오히려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줌

<표-17> 도농간 인구이동(2010-2020년)

(단위 : 명, %)

구분	2010	2015	2017	2019	2020
총 이동인구	8,226,594	7,755,286	7,154,226	7,104,398	7,735,491
농촌→도시(A)	829,814 10.1%	746,626 9.6%	704,585 9.8%	731,675 10.3%	761,749 9.8%
도시→농촌(B)	926,125 11.3%	828,443 10.7%	821,021 11.5%	745,912 10.5%	804,953 10.4%
농촌으로의 순유입(B-A)	96,311	81,817	116,436	14,237	43,204

출처 : 송미령,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재생의 핵심적 정책 수단

- 농촌재생 정책에서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도입 필요. 현재 농촌재생을 위해 지역의 특화된 마을 만들기, 빈집은행, 농산어촌 마을 스테이 구축 거주 지원, 교육과 보육의 다양한 지원 정책 및 체계가 모색되고 있음
- 그럼에도 소득과 생활안정에 관한 정책은 농업 관련 종사자의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임. 농업 소득의 불안정성, 실패의 두려움 없는 창업 등의 도전, 지역사회 봉사 와 참여 등을 위해서는 소득관련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
- 일본의 경우, ‘지역 부흥 협력대’⁷⁾로 농산촌 이주인구에게 인건비와 활동비를 지원 한 바 있고, 지원 종료 후 지역 정주 등 그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 이 점을 고려하 면 농촌주민 기본소득은 농촌 이주민, 특히 청년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농촌경제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의 자본이 아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재투자력을 구축하는 지역순환경제 형성이 중요
- 농촌 생활에서의 경제규모는 작은 경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생활안정과 소비가 가능. 이에 따라 적정한 기본소득은 작은 경제를 지역내 확실하게 구축하며, 지역순환경제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임

7) 일본정부가 인구 감소로 쇠퇴하는 지방을 살리고자 2009년부터 도입한 제도. 첫째 89명으로 시작해 최근 연간 5,000여명이 농촌으로 내려가 최대 400만엔(약 4066만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최장 3년간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적이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수행

-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주민의 소득보장을 통해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을 가속화시키는 인구 정책이자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경제 정책의 성격을 지님
- 농촌기본소득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재생이라는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 중 농촌 주민(이주민)의 소득보장을 위한 핵심적 정책수단이라는 위상을 지님

4) 충남의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o 농촌기본소득 사례

- 나미비아, 오티지베로(Otjivero). 기본소득 실험(Basic Income Grant pilot)⁸⁾
 - 2008년 1월 ~ 2009년 12월(24개월 진행). 각종 사회단체, 해외 지원기구 등이 결합한 나미비아 기본소득 연합을 구성하여 60세 이하 모든 주민(930명)들에게 어떤 조건 없이 한 달에 기본소득으로 100N\$ 지급
 - 기본소득 실험 이전, 그 지역 주민들은 기아와 빈곤, 타 지역으로 갈 수 없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는 곳. 기본소득이 실시된 이후 그 지역으로 이주 증대
 - 18명의 자체 공동체 위원회를 구성, 주민들에게 어떻게 현명하게 지급된 돈을 사용할지 도움을 줌
 - 가계 빈곤 감소, 경제활동의 증가, 어린이의 영양상태 개선, 에이즈 치료 접근성 강화, 교육 증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
 - 인도에서는 현금이전에 관한 공적 논쟁이 정치적으로 강하게 진행되어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010년 유니세프와의 협력을 통해 인도자영업여성연합(SEWA: 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 주관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전개

8) Big Coalition Namibia, The Basic Income pilot project(2007-2008)

- 18개월 동안 6,000여명이 매월 단위의 소액의 무조건적 소득을 지급받았고, 이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과의 비교하는 조사를 진행, 조사는 12,000여명에게 이루어짐
- 2개의 기본소득 실험 : ① MPUCT(Madhya Pradesh Unconditional Cash Transfer: 마디아 프라데시의 무조건적 현금이전)은 8개 마을은 개인별로 매월 보조금을 받고, 12개의 유사한 마을은 통제 마을이 됨. ② TVUCT(Tribal Village Unconditional Cash Transfer: 부족 마을 무조건 현금이전)은 1개의 부족마을은 모든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다른 1개 부족은 통제마을로 비교함
- 어린이 영양 실조 개선, 어린이 학교 출석률 향상, 일반 가정에 비해 기본소득 받은 가정의 소득 수준 더 높은 향상 등 긍정적 효과 나타남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계획

· 사업 개요

사업시기	2021년 ~ 2026년(5년)
지급대상	시범사업 지역,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
선정 방법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 선정
지급금액 및 주기	매월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효과분석 : 시범사업 전 사전 조사, 시범사업 중 중간조사, 사업완료 후 사후조사로 진행
- 시범사업 지역 선정 : 지역소멸 위험이 있고, 주민 수가 전국 면 평균 인구수(4,167명) 이하인 면 지역. 경기도 11개 시·군의 26개 면(최소 197명 ~ 최대 4,167명) 해당 기준 충족
- 지급액 산정기준 : 면 지역의 가구소득을 상대적으로 도시에 가까운 읍 지역의 소득만큼 보장. 읍 지역 가구의 연간소득(2,343.3만 원)과 면 지역 가구의 연간소득(1,923.7만원)의 차이인 419.6만 원. 가구원 수(2.36명)과 12개월로 나눈 금액. 월 15만원 지급
- 성과 지표 : 개인적 측면과 공동체 측면을 같이 평가

<표-18>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성과 평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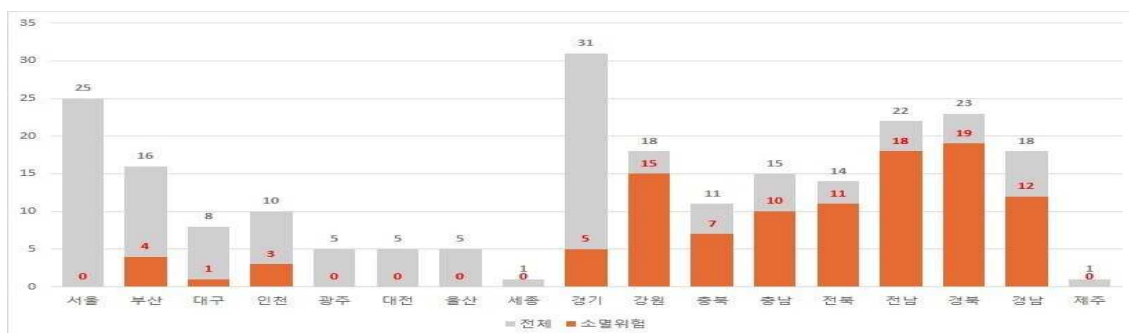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일반적 특성	① 일반적 특성
개인 (일과 삶의 균형)	② 행복 및 삶의 질
	③ 건강
	④ 경제 및 고용
	⑤ 주거
	⑥ 가족 건강성
	⑦ 소비 및 여가활동
공동체 (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발전)	⑧ 포용성
	⑨ 사회자본(사회관계망)
	⑩ 지역경제순환
	⑪ 지속 거주 의향
	⑫ 공동체 의식&정치의식
	⑬ 환경의식

○ 충남의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안)

- 충남의 농촌기본소득 필요성

- 충남은 10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높음

<그림-3> 광역자치단체별 소멸위험지역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0. 5.

- 서천군(0.178), 청양군(0.193)은 고위험지역, 부여군(0.202), 공주, 보령, 논산, 금산, 홍성, 예산, 태안은 위험지역으로 분류

- 충남지역 행정리 마을의 지방소멸지수에 근거, 2015년은 전체 행정리의 51.2%, 2020년에는 71.1%가 ‘소멸고위험’ 지역. 최근 그 비중이 매우 높아졌음

<표-19> 충남 행정리 마을의 소멸고위험비중(소멸고위험 행정리 수/행정리 수)

	전체 행정리 수	소멸고위험 행정리	비율
2015년	4,317 개소	2,211개소	51.2%
2020년	4,392 개소	3,123개소	71.1%

* 출처 : ‘충남 행정리 마을의 지방소멸지수와 마을 차원의 대응전략’, 충남연구원, 2021.6.

<표-20> 충남의 인구 감소 현황(2000년 대비 2019년)

10% 미만 감소	10%이상 20%미만 감소	20% 이상 30% 미만 감소
태안군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공주시, 청양군, 예산군, 부여군, 서천군

- 충남의 귀농·귀촌의 증가. 충남의 2020년 귀농 가구의 증가는 전국 증가율보다 9.1%p 높게 나타남

<표-21> 귀농 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2019년	2020년	증감률
전국	11,422	12,489	9.3
충남	1,260	1,492	18.4

<표-22> 귀촌 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2019년	2020년	증감률
전국	317,660	345,205	8.7
충남	33,654	35,573	5.7

- 2020년 귀촌 가구는 345,205가구(귀촌인 447,122명)로 전년 대비 8.7% 증가. 충남의 경우는 35,573가구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음(통계청, 「2020년 귀농귀촌인 통계」, 2021. 6. 24.)
- 충남 농촌 인구와 비중 : 전국 농촌인구 수는 971만4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7%임. 충남은 농촌인구 수는 68만2천7백여명으로 인구 비중은 32.2%를 차지하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보여줌

<표-23> 2020년 농촌인구 현황

(단위 : 명, %)

	전체 인구수	농촌인구 수	농촌인구 비중	농가 인구 수	농촌내 농가 인구 수 비중 ⁹⁾
전국	51,829,023	9,714,763	<u>18.7</u>	2,317,000	<u>18%</u>
충남	2,121,029	682,744	<u>32.2</u>	266,755	<u>30%</u>

- 농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선정 관련 기준

- ‘지방소멸위기지역’ 기준¹⁰⁾ : 2000~2019년간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인구 10만 이하인 지역 중에서 표의 요건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 단 인구 10만 이상 시·군중 인구감소율이 15%이상 시·군은 포함

<표-24> 지방소멸위기지역 선정기준(안)

세부영역	지표	선정기준
인구감소율	총인구 변화율	2000-2019년간 인구 감소율이 10% 이상인 지역
고령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수/총인구수	최근 5년간 평균 고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지역
생산가능인구비율	15~64세 인구수/총인구수	최근 5년간 평균 생산가능인구비율이 하위 50%인 지역

출처 : 박진경,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방안 마련연구』, 2020.9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기준 : 인구감소지수로 최근 5년간 연평균인구증감율, 인구 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로 평가. 이 기준에 따르면 충남은 ‘지방소멸위기지역’(2안)과 같은 9개 지역이 대상지역임

9) 전국의 농가 수는 1,036호. 이중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농가 수는 752호로 약 73%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 지역 농가 인구를 제외하여 추산함

10) 박진경,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방안 마련연구』, 2020.9

- 경기도 선정 기준 : 지역소멸위험(지역소멸지수 0.5 미만) + 전국 평균 인구 이하 면지역(면 평균인구 2020년 12월 31일 기준 3,904명)

- 충남의 농촌기본소득 대상 지역 선정 기준

- 1안) 경기도 선정 기준 적용 : 지역소멸위험 대상 10개 시·군(부여, 서천, 청양, 공주, 보령, 논산, 금산, 홍성, 예산, 태안) 중, 전국 면 인구수 평균 이하 지역으로 총 73개 면이 대상 지역. 대상인구는 280,000여명(평균인구 3,900명 기준)으로 추산
- 2안) 행정리 마을의 선정 기준 적용 : a) 지방소멸지수 적용할 경우 2020년 충남 전체 행정리 4,392개소의 71.1%인 3,123개 지역이 대상. 대상인구는 31,000여명(과소지역 100명기준)으로 추산 b) 인구 100인 이하 과소 행정리 기준 적용할 경우 1,606개 지역이 대상(2015년 기준). 대상인구는 16,000여명. 따라서 행정리 마을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15,000-30,000명으로 추산

- 충남 농촌기본소득 소요 예산 및 재원 마련 방안

- 지급 액수 :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의 기준(면 지역 거주 주민의 읍 거주 주민의 평균 소득과의 차이) 적용. 또한 현재 농민들의 소득보장 지원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적용(현 농민수당 월 5만원과 소농직불금 월 10만원으로 월 15만원임)
- 농촌기본소득의 소요 예산(년)은 1안의 경우, 5천124억 원 소요. 2안의 경우는 270억원 ~ 540억원 소요
- 지역소멸대응기금 :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기금 활용. 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광역자치단체에 2500억원, 기초단체 7500억 원의 비율 배분)
- 직접적인 소득재분배, 자원 분배 강화의 농정 재정의 재조정 : 기존의 농촌지역개발 정책 사업 예산 조정,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 예산 증액(현 2.8조원(농식품부 예산의 17.6%) → 2028년 10조원(농식품부 예산의 52% 수준))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실행 방안

- 실험 지역 대상 선정 기준은 마을(행정리) 기준으로 선정. 행정리 마을 선정은 충남의 15개 시·군 모든 지역의 소멸위기를 겪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점이

있음. 또한, 마을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발전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대상지역 선정 방법 : 1안) 무작위 추출, 2안) 공모를 통해 지역활성화 준비 정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기본소득 사회실험의 긍정적 효과가 높은 지역은 능동적 참여자가 존재하는 지역)
- 20여개 마을 선정 : 무조건적 기본소득 지급 마을, 참여형 기본소득 지급 마을 등으로 나눠 사업 진행. 참여형 마을은 농촌마을의 공익적 가치와 마을만들기의 실천을 약속하는 마을. 충남도와 해당 마을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진행
- 해당 지역 1년 이상 전체 실거주자. 소득 구분, 직업 구분 없이 모두에게 시범사업 2년간 지역화폐 개별 지급
- 시범사업 소요 예산 : 1개 마을(100명) × 연 180만원 = 1억8천만원. 20개마을 36억원. 2년 72억원 소요 예상
- 1년 예산 : 1개면(3,900명)×연 180만원 = 70여억 원. 3개면, 210억원(연). 시범사업 기간(3년) 총 630억원 소요 예상
- 지역화폐에 따른 경제효과 추산 : 2020년 충남 지역화폐는 7,300억 원 발행, 도내에서 6개 분야 3조509억 원, 고용 유발 5,786명 등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충남연구원)
- 충남 지방소멸위기 지역 전체 73면 대상으로 기본소득, 연 180만원 지급(284,000명)시 총 5,100억원의 지역화폐 발행. 이 경우 도내 6개 분야¹¹⁾ 2조1,790억 원, 고용유발 4,130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예상

-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 평가 요소

- 기본적으로 경기도 사례에 준하여 개인적 차원(일과 삶의 균형)과 공동체(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발전)차원의 평가 지표 적용
- 충남도는 수도권인 경기도와 달리 ① 사회적 인구 이동의 효과, ② 지역순환경제 구축 및 활성화 효과를 보완하여 적용. 즉, 농촌기본소득을 통한 농촌으로의 인구

11)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유발, 현금유동성 확보, 지역소득역외유출방지, 기타(소비촉진, 가계수입증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절감)

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정도를 평가 시도

□제안 사항

1) 농업·농촌 소득보장 제도 발전

○ 농어가수당의 발전 방향

- 농어가수당은 농민 개인별 지급으로 여성 농민 등 정책소외층이 없도록 함.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농민기본소득이 법제화될 경우, 농어가수당은 농민기본소득으로 재조정

○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도입

- 충남형 농촌 재생의 비전은 농촌기본소득을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 농촌으로의 거주 및 이주를 촉진하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순환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2) 충남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제안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방안

- 마을(행정리) 방식 지역 선정

- 소멸고위험 행정리 마을 3,123개소 중 20여개 선정, 2년간 1년 이상 지역 실거주자에게 개인별 월 15만원 지급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농촌기본소득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제정

- 국회에서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4개 법안)’이 제안되어 있는 상황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계획수립, 이주민 지원센터, 영육아지원센터, 청년 일자리 지원, 특별회계 설치, 각종 재정, 세제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러한 지원 정책과 더불어 ‘농촌기본소득 지원’ 내용을 추가할 필요. 지방소멸위기 지역인 농촌의 핵심적 문제는 생활안정과 소득보장 문제

-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기초적인 소득보장 해결. 아울러 농촌 기본소득에 따른 재정 문제를 법적 근거를 갖고 지역소멸대응 기금을 통해 전 국가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마련 가능

- 분권형 농촌재생, 농촌기본소득 정책 추진

- 중앙정부 중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역소멸대응기금 운영이 자칫 지방의 소외와 지방의 소멸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 우려. 중앙정부의 시·군별 인구감소지역 선정은 시·군별 세부 위기지역 선정 및 정책 대안으로 이어져야 함
- 지역소멸대응 기금의 활용 역시 중앙정부의 기준과 심의·선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의 자율적 선택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 분권형 방식이 실질적인 지방위기 해결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